

내주부터 본격적 본회의… 野 “與 전략 보고 대응할 것”

與, 野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고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與 “처리 순서 아직 정해지지 않아”
野 “與, 野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외공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스터 종결 동의를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

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

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가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외공직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親이재명 vs 親정청래’ 대결구도

친명계에 유동철, 이근태, 강득구
“당정의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친정청래에 문정복, 이성윤 의원
“내란청산 위해 당대표 중심 단결”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최고위원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 달 11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친(親)정청래 측 후보와 친(親)이재명 측 후보 간 대리전으로 선거 구도가 짜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출직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15~17일에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선출된 3명의 신임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당직을 수행한다.

정청래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당원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가 나는 등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친정청래계(친청)와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편을 나뉘서 대결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추측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지도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당원 1인 1표제’ 개혁이 추진 과정에서 속의 과정과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 내 인사는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근태 의원이다. 유동철 위원장은 원외 최대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

에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유 위원장은 자신이 친이재명계 후보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근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리감을 드러내는 ‘직통! 명통!’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며 지난 1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사건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당정의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방패에서 조각기소 진상 규명까지 개혁의 속도 최고위에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 1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인사 중 한 명이다.

친정청래 측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이 조만간 출마할 예정이고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 면직에서 유 위원장과 충돌을 빚은 인물이기도 해 선거 간두 후보 간 비방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치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원 1인1표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세력 간 대결로 비화되는 분위기에 지도부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엇박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정 대표께서 최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바늘 틈만한 구멍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며 “당 대표의 어휘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당정대 간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실현가능 목표 제시·불공정 관행 탈피·적극 행정’ 등 주문

》2면 ‘李 정부 출범 6개월…’서 계속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공개면서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사업계획이 30여년 넘게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

실을 보고드리고 속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해야 공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연

급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토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입찰 과정에 평가요소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패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

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압류 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를 언급한 것 역시 ‘공정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적극 행정을 해야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나 관세청에 마약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 모두 ‘적극 행정’의 부재라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주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기후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등 부처 보고를 받는다. 산하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검찰청이 포함돼 있다.

이번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후속조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